

민주화운동과 이념, 그 현재적 의의



시 간 : 2002년 9월 12일, 목요일

장 소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대회의실

사 회 : 박호성(본지 편집위원장)

토 론 : 강정구(동국대 교수, 사회학), 김상곤(한신대 교수, 경영학),

박석운(민중연대 상임집행위원장), 박원순(아름다운재단 상임이사),

양길승(원진노동자건강센터 대표), 지은희(전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 **박 호 성** : 안녕하세요. 이제부터 여러 방면에서 활동 중이신 선생님들을 모시고 한국 민주화운동의 역사와 의미, 그 특성을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이렇게 크게 세 부문으로 나눠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본격적으로 토론하기에 앞서 항상 이야기되는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또한 민주화운동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해 개념 정리부터 하는 것이 좋겠지요. 교수직에 있는 분들께서 우선 개념 정리를 해 주시고 현장에서 뛰는 분들이 보완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지요.

민주주의, 민주화란 무엇인가?

● **강 정 구** : 우선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 정리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사실 이 민주주의의 개념 정리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권력의 문제로서 ‘누가 통치를 하느냐’ (Who rules)하는 문제이고 두 번째는 절차 과정의 문제로서 ‘어떻게 지배하는가’ (How to rule)죠. 먼저, 권력의 문제는 주로 사회주의권에서 인민권력의 창출 그 자체가 민주주의의 실현이라는 식으로 개념을 써 왔고, 우리 해방 공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편, 서방측에서는 의회민주주의라

든지 절차나 과정의 문제로서 자유권이 라든지, 선거의 공정성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집중시켜 개념 정리를 해 왔구요. 그런데, 지금 동구 사회주의가 몰락한 시점에서는 인민권력이라는 주체의 문제가 소홀히 되면서, 절차에 얼마나 민주성이 보장되느냐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자유권이나 정치적 권리 등이죠. 그런데 인민 권력이 문제가 될



때는 사회권 등이 중심에 놓인 채 인민들의 삶을 증진시키고 인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그런 권력의 구성이 민주주의라고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우리가 추구해야 될 민주주의는, 저 개인적으로는 요즘같이 사회권이랄든지 권력의 문제가 방기되고 있는 것에 주목한다면, 자유권과 정치적 권리에 초점을 맞추는 민주주의 개념을 수용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두 가지를 모두 수용하는 포괄적인 민주주의, 그리고 이것을 위한 운동이 민주화운동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 김 상 곤 : 다 말씀하셨는데, 강 교수

님의 말씀에 이어서 이야기한다면, 실제로 그런 절차적 민주주의, 실질적인 민주주의 등 이런 부분들을 통합적으로 추구해 나아가고 달성해 나아가고자 하는 것이 민주화운동인데, 그런 인간의 제반 권리를 확보하고 그 권리를 어떻게 행사하고 확대해 나아가갈 것인가 하는 문제를 고민하는 것까지 민주화의 문제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지 은 회 : 뭐, 특별한 건 없구요. 저는 우리 운동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체적 삶의 증진에 과연 얼마만큼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가, 이

런 것을 생각하면서 국민에게 민주주의라는 게 뭘까 오히려 거꾸로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국민 한 사람에게 민주주의가 실현됐다, 한국 사회가 민주화됐다 하는 것은 결국 자기 삶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결정에 자기가 참여할 수 있다는 것, 이게 정치적 참여겠죠. 그걸 충분히 해 자기 삶의 방향을 다른 사람의 결정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결정하는 것,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일할 수 있는 교육을 받고 일할 기회를 받고 그 일에 대한 정당한

느냐라는 점에 좀더 강조점을 두는 흐름이 이른바 민중운동 진영 내지 그런 진영인 반면, 좀 달라진 점이 있지 않느냐, 좀 완화된 형태로 가지 않았느냐라는 점을 강조하는 흐름은 대개 시민운동적인 측면으로 가는 경향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 박석운

보상을 받게 되는 것, 그리고 문화적으로는 인간적인, 인권 같은 것이 상호 존중되면서 평등한 인간으로 대접받는 것, 심리적으로까지 얘기한다면 인간으로서의 어떤 독자성, 자율성 이런 것들을 향유하는 것, 이런 것이 민주주의가 아닐까 생각해요. 저는 오늘 토론에서도 한편에서는 이론적으로 접근하겠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에서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박호성 : 구체적 삶, '인간적 삶'의 모습을 많이 강조하셨는데, 혹시 더 첨가할 말씀은 없으신가요.

● 강정구 : 지선생님 말씀은 각 개인이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스스로 주체가 되어 이끌어내야 한다는 것을 의미

하는 주장이었지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권력이라는 문제, 스스로가 권력의 주인이 되면서 동시에 혜택을 입게 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선생님의 말씀은, 제가 말한 민주주의의 두 가지 측면을 다 포괄하는 개념으로 민주주의나 민주화를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것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 박석운 : 개념적인 접근은 학자들이 하시는 것이고, 저는 그 운동의 역사적 흐름, 뭐, 이런 측면을 좀 봤으면 합니다. 이런 생각이죠. 지금이 군사독재 시절과 뭐가 같은가, 뭐가 다른가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노동 현장 등에 경찰을 투입하고 그런 것은 군사독재 시절하고 거의 같단 말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국민의 정부에 대해 비판하고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사람이 대통령으로 있는 이 정부가 군사독재 시절과 뭐가 다르냐하는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그러나 표면적인 양태로 보면 군사독재 시절, 우리가 감옥 가던 시절에 비하면, 물론 요새도 감옥 가는 학생들이나 청년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 이전의 양상과는 다른 양상이 보이는 게 사실이란 말이죠. 그래서 군사독재 시절과 거의 같은, 군사독재 시절부터 거의 변하지 않는 부분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군사독재

시절보다 상당히 좋아졌다. 많이 민주화됐다 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면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전보다 달라진 점이 뭐가 있느냐라는 점에 좀더 강조점을 두는 흐름이 이른바 민중운동진영 내지 그런 진영인 반면, 좀 달라진 점이 있지 않느냐, 좀 완화된 형태로 가지 않았느냐라는 점을 강조하는 흐름은 대개 시민운동적인 측면으로 가는 경향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걸 뭐 제 해석입니다(웃음). 어쨌든, 우리나라는 이 두 가지 과제가 중첩되어 있는, 부르주아 민주주의조차 아직 완수하지 못한 측면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민주주의의 실질적 과제라 할 수 있는 사회권적 민주주의, 이런 부분들도 한꺼번에 같이 얘기해야 하는 중첩적 과제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면서, 다만 저항도 탄압이나 완화된 통제체제 내에서 다소 정확한 지향점을 합의할 수 없는, 전반적으로 다소 운동이 분산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물론 분산되어 간다는 것이 각 부문 운동들이 활성화되어 가는 그런 측면을 이야기하는 측면도 있지만, 너무 과도하게 분산되면서 잘 집중되지 않는 문제가 또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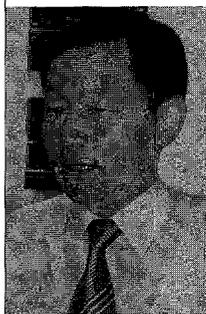
● 박 호 성 : 박 석운 위원장님의 말씀은 나중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민주화운동의 문제점, 과제, 속성 등 이런 걸 이야기할 때 더 구체적으

로 이야기가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말씀을 간단히 정리해보면 정치, 사회, 경제권을 포괄하는 다양한 인권을 각 개인이 스스로 주체가 되어 쟁취하고 또 스스로 그것을 향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아가는 노력, 이것이 민주화운동이고, 그것은 구체적인 삶 속에서 이뤄지는 것이다. 대략 이 정도로 정리가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 박 원 순 : 제가 조금 더 보충하면요, 우리 헌법의 체계를 보면 크게 두 가지 거든요. 하나는 권력 구조라는 부분이고 다른 하나는 기본권이라는 부분인데, 지금 주로 말씀하신 부분은 기본권의 측면이거든요. 기본권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유권적 기본권이 있고 생존권적 기본권이 있는데, 이게 과거 사회주의권에서는 후자를 중시했고 나머지 이른바 서방 선진국은 전자를 강조했는데, 어쨌든 그런 양쪽의 기본권이 다 제대로 보장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권력 구조의 민주

화라는 것은 직선제라든지, 권력간의 견제와 균형이라든지, 특히 사법부의 독립, 그리고 대의민주주의와 그 한계를 극복하려는 참여민주주의, 뭐 이런 것들이 제도로 발전해 나아가는 것이 권력 구조의 민주화입니다. 이렇게 두 개의 방향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근데 이게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굉장히 불만족스러운 진전밖에 이루지 못했거든요. 민주주의에도 커다란 방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수준과 질이 있는 것인데, 저는 아직도 걸 어갈 길이 멀다고 판단합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지금 보는 민주주의는 결코 완성된 것이 아니라 아주 기본적인 몇 가지 도구나 장치가 형성된 것이라고 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예컨대 지금 '자유민주주의' 라고 하는 것들은 가만히 따져 보면 '극우파들'의 주장과 통하는 측면이 없지 않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민주주의는 그 이름만으로는 해석할 수 없는 다양한 논쟁과 해석이 있을 수 있겠지요, 또 시민단체들이 그동안 많이 좋아했던 참여민주주의, 어떻게 하면 그런 과정에서, 아까 강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과도 일맥상통하는 건데, 말하자면 주인이 권리를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것을 실현해 나아가는 과정 자체에 중요한 권능을 행사해야 실질적인 주인의 행세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인데, 이건 또 논쟁도 있는 것 같고, 어쨌든 이런 것은 나중에 다시 미완의 과제로 이야기할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 상 곤** : 저도 한 가지만 보충할게요. 이야기를 너무 간단히 한 것 같아서……(웃음). 대개 정치·사회적인 민주화, 이쪽 부분을 많이 이야기

하시는데, 실제로 아까 말씀하신 삶과 직접 관련된 부분인 경제 민주화라는 부분이 좀 논의되고 그런 부분에서 검토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치적인 민주화와 관련해서 참정권이라든가, 대의권이라든가, 의사결정의 공동체적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증진시켜야 하지만, 나아가 경제 민주화와 관련해 분배의 정의 문제, 이익의 균점 문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의 삶 속에 일정한 정도 달성해 나아가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경제 민주주의 운동과 관련해서는, 경영 참여와 이익 균점의 실현으로 나타나는데, 이 두 가지를 경영 참가권과 이익 균점권 등의 형태로 헌법에 넣자 라는 그런 주장과 시도들이 있었습디다만, 아직까지는 경제 민주화

와 관련된 기본적인 개념이나 권리가 헌법에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상황이라는 것을 참조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향후 이런 경제 민주화 문제가 운동의 주요 과제가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박원순** : 현재 민주주의의 상황은 평가의 주체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관변 학자들은 이미 민주주의가 실현됐다고 볼 가능성이 좀 많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 운동가의 경우에는 지금도 과도적 민주주의의 상황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과거 제3세계나 이런 쪽의 군사독재가 종식된 이후에도 이른바 민주화 이행이 이야기되면서 과도기적인 상황이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는 예컨대 아까 정리하신 민간독재, 군사독재, 아마 5공까지가 군사독재고 그 다음에 노태우 정권조차도 군사정권으로 간주할 수 있거나 아니면 유사 민주주의라고 부를 수 있다고 생각하구요. 그 다음에 김영삼, 김대중 두 정부는 과도 민주주의, 즉 민주주의의 모양은 갖췄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한 상황으로 간주합니다. 그런데 저는 다음 정부의 책임자가 누가 되든 다음 정권까지도 과도 민주주의 성격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아직까지 실질적인 민주주의는 요원

한 것이라고 봅니다.



● **양길승** : 저는 조금 엉뚱한 말을 붙여 놓고 싶습니다. 민주화되어야 할 것을 권력 구조와 권리라는 측면에서 볼 때 거대한 권력이 아닌 작

은 권력이랄까, 권력이라고 보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다고 볼 수도 있는 관계에서 요구되는 민주화가 있습니다. 직장 안에서 상사-부하의 관계, 의사-환자의 관계, 가정 구성원 사이의 관계 같은 것 말입니다. 사회의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겉으로 크게 바뀌면서 내부나 내부 관계는 안 바뀌어 문제가 되거나, 같은 그다지 바뀌지 않았는데 내부의 변화가 시작되어 예상치 못했던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민주화가 변화 과정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지고 있는 과제와 속성을 같이 놓고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고 그래야 민주화의 실상이 분명해지지 않을까 합니다.

민주화운동 전개 과정과 특징

● **박호성** : 지금까지의 논의를 토대로 이제 한국 민주화운동을 되돌아보는 차원에서 8:15 이후 오늘날까지 한국 민

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분단과 통일의 움직임을 기준으로 해서 시기 구분을 할 때 보통 다섯 시기로 나눕니다. - 강정구

주화운동을 시대 구분해보면 민주화운동의 발전 과정을 가늠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각 발전 단계마다 나름대로 고유한 특성들이 있을 텐데, 그것을 하나씩 추출해 보는 것도 전체를 조망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만.

● 강정구 : 갑자기 질문을 해서 잘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만, 민주화 문제는 사실 분단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분단과 통일의 움직임을 기준으로 해서 시기 구분을 할 때 보통 다섯 시기로 나눕니다. 처음은 45년부터 한국 전쟁이 끝나는 53년의 기간으로 이 시기 미군정이나 초기 이승만 정권은 전형적인 경찰 독재 국가의 형태를 취했던 것이죠. 그게 분단 출발기였구요. 한국 전쟁이 끝나고 4·19까지가 분단공고화기, 1차 공고화기죠. 그러니까 출발기와 공고화기에는 외향적으로는 민주화를 표명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가장 반민주적인 냉전 독재가 판을 쳤던 기간이죠.

4·19혁명을 계기로 해서 분단이 완기가 됐거든요. 장면 정권이 들어서면서, 절차상의 민주주의, 이런 것들이 정치적 수준에서나마 좀 더 진전됐던 것이 분단이 완기이고 이제 5·16쿠데타 전까지 이어졌죠. 이제 5·16부터 전두환 정권까지를 분단 재공고화기라고 간주합니다.

그런데 이 시점을 볼 때, 이승만 때는 냉전 독재였지만 박정희 때부터는 개발 독재화가 되어 지배가 훨씬 체계화·정교화되지요. 이승만 때는 완벽하지 못하고 허술한 구멍들이 보인다면 박정희 때부터는 중앙정보부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 민중의 삶 하나 하나까지도 완벽하게 통제하는 암흑기의 특질을 갖게 되죠. 저는 이 시기를 분단 재공고화기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의 제도화와 이행기로 접어드는 게 6월 항쟁이라고 보고, 그때 6월 항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노동자 대투쟁에 의해서 민중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분단의 재공고화기에서 통일시대로 접어들게 되는데, 88년에는 통일 투쟁이 분명히 일어나거든요. 이때부터는 통일 시대로 들어오면서 절차적 민주주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진전이 있었고 김대중 정권이 들어와서, 저는 이걸 통일성취시대라고 부릅니다(모두 웃음). 희망적인 사항일지는 몰라도 저는 어쨌든 이렇게 시기 구분을 하는데 아

마 통일시대와 통일성취시대 이 부분이 민주화에서 좀더 진전된 형태가 아닌가하는 생각은 하는데, 그걸 어떻게 불러야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분단의 이완 정도에 따라서 민주화라는 것은 그것이 인과 관계라는 측면도 있겠지만, 상관 관계를 가지고 진행된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 **박석운** : 강교수님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만, 대개 시대 구분과 관련해서는 정치적인 흐름, 권력의 흐름이 역시 중요한 측면이죠. 우리 삶의 전 부분에 영향을 주는 것이니까요. 여러 가지 분류법이 있겠지만 운동사적 관점에서 분류를 해보면, 저는 크게 봐서 70년과 87년을 경계로 끊어서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일제시대 이후부터 쪽 운동이 진행되어온 것은 한국전쟁에서 아마 1차 정리가 됐고, 그것이 단절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남아 있는 잔존 영향들이 60년 4월 혁명에 잠깐 반짝하지만 5·16쿠데타 이후 60년으로 넘어가면서 종전의 해방 전후 시대의 영향들은 거의 다 사라진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고, 다시 거의 맨땅에서 새로운 운동들이 움트기 시작하는 그런 타이밍, 그 기점이 70년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전태일의 분신이 있었고 비상조치법이 발동되고 또 여러 가지 경제 성장의 패턴



이 달라지고 독점이 강화되고, 뭐, 이런저런 근거로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대충 공감아 될 것이구요.

이 동토를 뚫고 나오는 싹이 밝히

면서도 다시 싹터 오르고 해오다가 대중적인 운동의 형태로 개화하는, 꽃을 피워 나가는, 구체화되는 것이 87년 6월 항쟁과 7~8월 노동자 대투쟁 이거든요. 저는 이 두 개를 세트로 보거든요. 그 두 개를 분리해서 보는 건 아주 단편적인 시각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6월 민주화항쟁과 7~8월 노동자 대투쟁이 하나의 세트로서 우리 사회 전체의 실질적인 민주화를 이루는 대중적 토대가 됐다고 보거든요. 저는 대개 70년과 87년을 이렇게 보고, 현재는 87년 체제 내지 그 시대의 후반기가 되는데 앞으로 이 흐름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는 87년 시대가 아직도 진행되고 있다고 봅니다.

● **김상곤** : 지금 두 분께서 시기 구분을 하시며 특징을 말씀하신, 대체로 분단과 통일이라는 관점 또는 계급적인, 혹은 민중적인 부문에서 나타난 중요한 계기들, 이런 것들에 공감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4·19와 6월 항쟁, 6월 항쟁에 덧붙여



서 노동자 대투쟁 이런 부분들이 갖는 의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근현대사에서 우리 운동의 근원이라고 하는, 예를 들면 동학혁명이라든가 3·1운동 이런 것들이 우리의 근대사를 여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처럼 해방이후에도 중요한 역사적 계기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해방 이후 남북이 분단되어 남쪽에 자유당 정권이 수립되면서 민간독재가 들어선 상황에서 4·19는 그것에 파열구를 내는 역사적 의미를 지닙니다. 그것도 국민적인 저항, 거기에도 하나 덧붙인다면 학생들이 중심이 된 저항, 이런 저항의

운동으로서 4·19가 갖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미완의 4·19혁명'이라는 표현도 사용합니다만, 그 나름대로는 4·19가 하나의 역사적 계기를 만들었고 그 정신이 뒤에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4·19를 계기로 이뤄진 여러 가지 민주화를 위한 가능성들이 군부에 의해서 다시 무너지면서 지나간 암흑의 군부독재 시절이 이어지고 철저하게 인권과 기본권이 말살되는 그런 상황이 지속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속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국민들, 특히 시민이라고 하는 블록이 의식의 동일체화를 진전시키면서 나름대로

근부독재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의 결과가 바로 6월 항쟁이 아니겠는가라고 봅니다. 6월 항쟁은 물론 근부독재에 대한 저항의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한 면은 시민적인 권리를 이제 확보해야 한다는 대자적인 인식이 상당히 공유되면서 그것이 폭발하는 한 계기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것에 이어 이제 노동자들도 자신들의 기본권을 확보해야 할 상황이라는 인식을 하게 되고 6월 항쟁의 영향과 현장의 잠재력 등이 함께 합쳐지면서 노동자 대투쟁으로 이어지는 거대한 87년의 드라마가 만들어진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 **지은희** : 하나만 보충하고 싶은데요. 이를테면 가장 대규모의 항쟁은 4·19나 6월 항쟁이 맞아요. 근데 우리가 항상 역사를 정리할 때 잊어버리는 부분이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해방 이후의 다양한 사건들, 반체제적인 운동들, 예를 들면 4·3사건 등, 이것들은 개별 사건으로 정리할 때는 조명을 받지만 전체 역사를 볼 때, 즉, 통사로 볼 때는 간과되는 측면이 없지 않거든요. 4·19라는 것도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명백히 한계도 있거든요. 6월 항쟁도 마찬가지구요. 그런 부분들이 짚어져야 할 것 같구요, 나아가 좀더 본질적인 문제를 제기했던 소규모의 운동들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고 평가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도 중요한데, 기념사업회에서 좀 염두에 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박호성** : 앞에서 민주화운동의 개념을 논의할 때, 제가 한번 이야기해 볼까 생각했었는데, 4·3봉기나 대구봉기 같은 것을 민주화운동의 범주에 집어넣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에 관해서는 어떻게들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 **박원순** : 우리가 민주화라고 할 때, 5공 때 우리가 주장했던 걸 따지고 보면 독재에 대한 민주화, 외세에 대한 민족주의, 그 다음에는 민권,

생존권, 이런 것들을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당연히 민족주의도 민주화라는 큰 개념 속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4·3사건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성격도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하긴 어렵지만, 탄압받던 민중들의 자연발생적인 소요 같은 측면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 또 해방 이후 잔존한 경찰 같은 관료들에 대한 저항,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사람마다 다 다를 수

때 우리가 주장했던 걸 따지고 보면 독재에 대한 민주화, 외세에 대한 민족주의, 그 다음에는 민권, 생존권, 이런 것들을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당연히 민족주의도 민주화라는 큰 개념 속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 박원순

있겠지만, 아까 저희들의 기준들로 따지만 포함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 **강정구** : 저는 통일운동사적으로 보면, 46년 10월, 대구의 10월 항쟁부터 통일운동사로 잡아야 하고 본격적인 게 48년 2월의 2·7구국투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본격적인 출발이고 그 연장선상에서 4·3이나 여순항쟁 이 모든 것들을 통일운동사의 일환으로 잡아야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민주화하고 관련시켜, 이 통일투쟁이란 게 민주화 투쟁과 별개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저는 절대로 별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민주주의란 것은 인민권력의 창출이라는 그런 하나의 측면이 있고 또 미국식 자유권의 신장이라는 개념이 있어 두 개가 대립되어 왔다

고 생각됩니다. 해방 공간의 경우,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 민주주의가 다르게 보이겠지만, 좀더 많은 사람들은 인민권력을 창출시키는 것, 이것을 민주화로 주장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4·3도 그렇고 2·7도 그렇고 10월 항쟁도 구호로 보면, '권력을 인민위원회로 넘겨라' 이런 이야기거든요. 물론 분단을 막는다는 측면도 있지만, 인민권력의 창출이라는 게 다 나와 있습니다. 4·3이나, 2·7이나, 10월 항쟁이나 여순항쟁에도 그런 인민권력의 창출이라는 맥락에서 보면 민주화를 위한 투쟁입니다. 그러므로 이걸 분명히 현대 민주화운동사의 출발점으로 보고 거기에 넣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한국 민주화운동과 미국

● **박호성** : 예, 감사합니다. 4·3항쟁이나 대구항쟁 같은 인민권력을 창출하기 위한 노력도 민주화운동의 범주 안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이 지점에서 제기될 수 있는 문제가, 한국의 민주화 과정에서 과연 미국의 역할은 어떤 것인가인데, 자연스럽게 논의를 진전시켜 보시죠.

● **강정구** : 세 가지 측면에서 미국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이야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첫째, 해방 공간에서 미국의 역할을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해방 공간은 우리 역사의 갈림길이 있거든요. 그 시점에서 이쪽으로 가느냐, 저쪽으로 가느냐에 따라 그 이후의 한 50년의 역사가 기본적으로 방향이 굳어 진다는 거죠. 조그마한 변화는 있지만 기본 틀이 완전히 확정지어지는 결정적 시기가 해방 공간인데, 바로 그 시점에 미국이 우리 조선을 점령함으로써 남한 사회가 나아갈 기본적인 궤적을 강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여파로 인해 지금까지도 우리 역사의 굽이굽이마다 미국이 개입을 해서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자주권의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 이런 맥락에서 미국을 봐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것을 발생론적 결정론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민주화와 결부시켜 본다면, 그야말로 이승만의 냉전독재가 생성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조건 지운 게 미국, 미군정이라 봐야 하거든요.

두 번째는 일반적으로 미국을 인식할 때 자유와 민주주의의 상징이니 뭐니 이야기하는데, 이게 전부 허구란 이야기죠. 왜 허구냐, 이 해방 공간만 보더라도 출발 자체가 그렇다는 겁니다. 미군정의 3년, 이것은 전형적인 경찰 독재국

가였죠. 그 다음에, 정치적 민주주의의 출발로서 가장 관건이 되는 것이 선거라고 볼 수 있죠. 우리 역사상 보통선거가 처음으로 실시된 게, 48년 5월 10일인데, 이 5·10선거는 전형적인 반민주적 선거였던 거죠. 선거는 국민 일반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서 정치권력 등을 구성하는 제도인데 제가 보기에 5·10선거는 전혀 그것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미국과 우리 민주주의의 경로의 관련성은 역사적인 교훈인 6월 항쟁에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6월 항쟁이 터지니까 6·29선언으로 대응하게 되고, 이에 대해 전두환의 연출이고 뭐고 하는데, 이건 미국이 연출했다는 것입니다. 전두환이나 노태우는 연기자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6·29선언을 통해 예방 혁명으로 나아가는 거죠. 이걸 보면 기본적으로 85년부터 민주화 투쟁이 가열되니까 미국이 이원집정부제를 통해 기존 구조를 보호하면서 수동 혁명이랄까 이런 것을 유도해내고자 했고, 이게 안 되고 6월 항쟁으로 저항을 받으니까 6·29선언을 통해 대통령 직선제를 들고 나온 거예요. 이것은 미국이 해방 공간에서 발생적 결정론자로서 엄청난 힘을 행사했지만, 우리의 역량에 따라서 근본적인 변화는 아니더라도 정책을 수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

여주는 것이지요. 이것은 6월 항쟁의 과정에서 보면 그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민주주의를 진전시키는 과정에서 미국과의 관계도 이런 점에 주목해 역사적 교훈을 끌어 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박 원 순** : 강선생님, 전 그런 학문적 깊이는 없지만, 뭐랄까 조금 과도한 부분이 있으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미국의 책임이 역사의 곳곳에서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모든 걸 다 미국의 책임으로 몰아 버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주체적인 책임도 있지 않느냐는 것이예요. 예를 들어 미군정 시기만 하더라도, 물론 전범 국가인 독일이나 일본은 미국이 점령군이었기 때문에 우리와는 차이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차이가 없었던 문제도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독일 같은 경우에도, 독일인들의 주체적인 노력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그 사회를 민주화시키는 데 상당한 역할을 했고, 오히려 미국의 그런 타율적인 측면이 주체적인 민주화에 도움을 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건 일본의 평화 헌법 같은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은 반대하는 여론도 많아졌지만요. 어쨌든, 이제는 미국의 부정적 개입을 우리가 분명히, 제대로 이해하는 것

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이용하고 활용해서 이 나라가 민주화하는 데 조금 더 잘할 수 있지 않았겠는가 하는, 우리 자신의 측면도 보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 **김 상 곤** : 제가 생각할 때는 강정구 교수님이 미국의 책임론을 쫓 이야기하시고 그러면서 민주주의에 미국이 순기능을 한 건 없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박변호사님은 민주화 내지는 민주주의 진행 과정에서 미국의 책임론이라는 것을 전적으로 이야기하다 보면 오해의 소지 또는 과도한 추론의 소지가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의 지적이 아닌가 싶은데요. 근데 저는 이런 측면에서 이야기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칫 책임론이 과해지다 보면 미국의 음모론적 결정론,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수 있는데, 그런 의미는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미국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 시민들, 민중이 어떤 인식의 변화를 가져 왔는가 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해방 공간에서는 자주적인 인민정권을 수립하려는 쪽에서는 당연히 반미, 즉 미군정 내지 신탁통치까지도 반대하면서 분단된 정부가 아니라 통일 정부를 세우려는, 그런 의도까지 포함한 운동이 벌어졌고 그런 인식들이 상당한 정도로 일반 국민들

사이에 퍼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해방 공간의 그런 계급적인 민족운동, 이런 부분들이 철저히 무너지면서 그 뒤는 일방적인 정권의 홍보, 이런 것을 통해서 미국에 대한 생각이 전과됐고, 혈맹과 우방, 그것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은 무언가 미적지근하긴 하지만 그런가보구나 하는 수준으로 양국의 관계를 이해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80년 5·18 광주항쟁을 계기로 미국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인가라는 의문을 갖게 됐지만, 워낙 강한 군부독재가 시행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때도 그것이 표출된다던가, 표현되기에는 어려웠습니다. 그러던 것이 80년대 중반 자민투, 민민투 등 학생운동의 투쟁 조직에 의해 미국에 대한 우리의 의문을 표현하는, 그런 조직적이고 집단적인 요구와 행동이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반 국민들에게는 94년도 전쟁 직전까지 갔던 핵 위기 상황, 이것이 일반 국민들의 뇌리 속에 상당히 깊이 박혀서, 미국이 과연 우리에게 플러스적 요인이 많은 나라인가, 이런 것들을 상당 정도로 고민하게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핵사찰 문제였습니다만, 작년 말부터 금년에 들어서서는 부시의 '악의 축' 발언이라던가, 이런 것을 통해서 미국이 다시 한번 자신의 패권주의적인 세계지배 전략을 한반도에서 그

대로 옮기려 하는구나 하는 생각들을 많이 갖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광주민중항쟁, 87년 시민민중항쟁, 이런 것을 거쳐오면서 우리 시민사회 진영도 성숙된 인식 속에서 미국 문제를 다시 보고 미국이 순기능보다 역기능을 많이 한다는 것을 상당한 정도로 인식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 **지 은 희** : 저도 좀 보충하고 싶은데요. 우리 사회의 진정한 민주화라는 것을 가로막는 것이 분단이라고 볼 때에, 남북관계에 미국이 얼마나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이것 좀 강조하고 싶어요. 강선생님도 계셨던 것 같은데, 2000년 10월 평양에 갔을 때, 마침 김영성 당시 위원장이 조미공동코뮤니케가 발표됐다고 기뻐하면서 너무 좋은 뉴스라고 우리에게 전해주더군요. 이게 잘 되어 북미 관계가 상당히 진전될 것이라고 굉장히 기뻐하면서 우리에게 보고했다구요. 그때 제가 느낀 것은 북한 사람들이 실제로 미국의 힘 내지 미국이 지배하는 위협, 이런 것들을 굉장히 느끼고 있으며, 그게 해소되어야만 지금 북쪽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이 결국 해결될 것이라는 인식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조미코뮤니케를 보면, 북한이 테러방지에 대한 다양한 협약에 가입을 하고 북미 관계를 풀기 위해서

주눅 들어 있거든요. 우리는 아직도 지난 냉전 시대를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저장도 냉전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 김 상 권

클린턴 대통령이 방북을 하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올브라이트가 평양에 온다는, 이런 내용들이 있었다구요. 그리고 당시에 그것이 진전되면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 조치를 풀게 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가만히 보면 그렇게 북이 기대했던 미국의 약속들이 거의 지켜지고 있지 않아요. 예를 들면, 제네바 협정에서 약속했던 경수로, 북한의 그 어려운 전략 문제를 유일하게 풀 수 있는 경수로로는 2003년까지 안 될 것 같고, 경제제재 조치도 안 풀릴 것 같고, 이런 근본적인 것을 풀어주지 않음으로써 결국 북한을 굉장히 제약하고 있고 이게 남북 관계를 진전시키는 데 정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느껴거든요. 결국 남북 관계의 진전을 가로막고, 분단 상황이 이런 식으로 미국의 속도나 의지에 따라 조종된다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의 민주화를 제약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판단이 듭니다. 여전히 저는 미국이 다양한 카드를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분단 상황을 해

소, 극복하는 데 근본적인 제약 조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것을 좀 강조하고 싶어요.

● 박 석 운 : 미국의 의미에 대한 의견들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조금 다른 포인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개 남, 북, 미, 일, 중, 소 이러는데요. 북미 관계는 아까 클린턴 이야기를 했지만, 그것에 대해서 저는 북한 쪽이 당시에 준비가 조금 덜 되어 있었겠지만, 조금 머뭇거리다가 타이밍을 놓친 것이라고, 그래서 아마 상당히 좋은 정치적인 판을 만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참 아쉽게 됐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남한과 미국과의 관계 문제는 아까 김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6·25전쟁 전까지는 미국에 대한 저항이 있다가 80년 때까지는 일방적인 미국의 패권이 관철되던 시기였던 말이지요. 그러다가 80년 광주항쟁 때 최초의 인식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 뒤로 분단 문제를 둘러싼 이런저런 투쟁을 경과하면서 90년대 들어 그 씨앗이 움트게 됐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국에 대한 그런 판단들이 대중적으로 생기기 시작한 계기는 대개 신자유주의 세계화 광풍이 몰아치던 98년 IMF 외환위기 시기가 아니었겠는가 생각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 시기는

정치적·관념적인 시각에서 미국을 봐 오다가 일상생활에서 미국의 의미가 대중적으로 각인되는 계기로 볼 수 있겠지요.

● **강정구** : 신자유주의의 합리적 측면은 좋다고 봅니다. 근데 명목적 측면은 예측주의다 이렇게 생각하구요.

● **지은희** : 그런데 난 그 경우도 선생님이 합리적 반미라는 개념을 사용하실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지금 여중생 사건을 봐도 그렇고, 어디 거기에 반미가 있나요. 그 사건에 대한 사죄, 소파 협정의 개정 정도를 요구할 뿐이지, 지금 당장 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건 합리적인 균형잡기 운동이지.

● **김상곤** : 균형잡기 운동을 하기 위해 반미를 하는 것이지요. 반미라는 말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해방시킬 필요가 있어요. 말하자면, 우리는 반미라는 말에 너무 주눅 들어 있거든요. 우리는 아직도 지난 냉전 시대를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저강도 냉전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아직도 반미라는 부분은 우리가 주장하면 혼나겠구나 하는 생각들이 무의식중에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친미나 반미라는 것은 객관적인 용

어가 아납니까.

다만 반미에 대해, 아까 강선생님이 말씀하신 그런 분류를 할 수 있는 거고, 저는 반미를 통해서 균형이 잡히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너무 반미 하는 걸 겁내지 말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표현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너무 민감해 할 필요가 없어요. 반미라고 이야기하면 과격하고 반미라고 이야기하지 않으면 온건하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 **박호성** : 여러 선생님들이 미국에 대해 하시고 싶은 말씀이 대단히 많은 듯합니다. 분단 문제라던가 IMF를 겪으면서 대미 인식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 합리적 반미, 명목적 반미 등의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대체적인 의견은, 미국은 과거 한국 민주화의 걸림돌로 작용했을 뿐만 아니라 현재도 그런 실정이라는 것이 지배적 의견인 것 같습니다.

● **박원순** : 박정희 군사독재 시절에는 미국이 일시적으로, 부분적으로 일정 정도의 민주화운동을 고무했던 혹은 고무했다기보다는 우리가 짝사랑하게 했던 그런 운동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것도 객관적 사실이라고 보거든요. 저희는 그 시대에 살았고 그 시대에 운동을 했는데 그것에 한계가 있다고 비판하면서

도 전체적으로 수많은 반독재 민주화운동의 내부에 그런 미국에 대한 일정한 정도의 기대, 짝사랑, 미국에 대한 약간의 추파, 이런 저런 부분들이 일정 정도 있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큰 흐름으로 보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봐야 하지만, 민주화운동의 일정 시기에 그런 측면도 있었습니다.

● **김 상 곤** : 그런 순간순간의 운동과 관련, 미국의 순기능적 요소가 있었다고 하지만, 과연 미국이 어떤 목적으로 그 역할을 했을까, 정말로 민주화 내지 민주주의의 신장을 위해, 한국 민주화의 신장을 위한 역할을 처음부터 의도하고 그런 역할을 한 것인가, 이런 면은 또 따져봐야 할 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박 석 운** : 저는 미국의 의도가 어떻든지 간에, 객관적인 대중적 운동의 흐름, 객관적인 사회적 힘 관계의 흐름으로 볼 때, 미국의 의도는 그렇지 않았겠지만, 즉 한국을 체계적으로 통제하고 패권을 유지해 나아가는 고도의 입체적인 통제 전략으로 볼 수 있겠지만, 당장의 운동사적 흐름으로 본다면, 박정희 군사독재 정권에 항거하는 데 부분적으로 미국의 순기능적 측면이 있었다고 보는 게 현실적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역사의 발전에 있어 본래의 의도와는 다

르게 객관적인 흐름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초기의 봉건세력들과 지주들이 노동자들과 연합해서 부르주아와 경쟁하는 경우가 노동운동 발전사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 미국의 의도는 그런 것이었겠지만, 그러나 운동의 특정 시기에, 즉, 박정희 군사독재 정권과 싸우는 유신독재 시기 정도에, 일부 영역의 측면에서 그런 순기능적 측면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 **박 원 순** : 그때 미국의 카터 대통령이 인권 외교를 주장했지만, 항상 일관된 것은 아니었거든요. 미국의 대통령과 정권에 따라서 성격이 다르고……. 그러나 미국은 어디까지나 자신의 국익을 위해서 행동하는 것이고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인 것을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기억했다가 이야기하는 것 같거든요.

● **강 정 구** :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미국이 자신들의 국익을 위해 하는 일이 당연시되면 안 되는 거죠. 미국이 국익을 위해서 하는 것은 좋지만 전체 세계의 보편적 이익과 일치될 때, 그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이지요. 지금 그 이야기도 조건적으로 인정을 합니다. 비록 카터 정권 때 인권 외교라든지 이런 것들을 일부 진전시키기 위해서 노

력한 것은 분명 인정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은 미국의 안보 제일주의가 관철됐던 한도 내에서 했던 것이었고 바로 그 당사자인 카터가 대통령일 때 12:12가 터졌고 5:18이 터졌던 거죠. 그러면 인권 외교와 민주화를 말하는 대통령이 똑같은 대통령인데, 우리 민주화가 결정적인 기로에 섰을 때 뭘 했느냐를 질문해야 합니다. 12:12와 5:18을 지지한 것이 미국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안보제일주의에는 절대 해가 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때로 그런 사실이 있었다는 정도로 기억을 해야 합니다.

● **박석운** : 지금 논의된 전체적인 흐름에는 대개 동의하고 또 저도 그런 입장에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미국을 우리 민주화운동 과정 속에서 그렇게 단칼에 정리할 때, 혹은 일원론적으로 환원시킬 경우에 그렇게 하기 어려운 측면도 실제로는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 점을 좀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구요. 물론 저도 그 시기 미국의 통제 전략의 입체성에 대해서 비교적 강경하게 주장하던 사람입니다만, 그 당시 미국의 의도가 어떻든지 간에, 그것이 어떻게 작용했던지 간에, 현실 민주화운동 가운데서 군사독재 정권과 싸우는 세력간의 역관계에 있어서 미국의 영향력이 작용한 것은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것은 명확하게

지적을 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 **박원순** : 정부 외에 민간이라는 쪽을 보면, 여전히 우리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정말 잊을 수 없는 지원을 한 것도 사실이거든요. 미국의 변호사들, 목사, 개인과 민간 영역에서의 우정이라던가 이런 것이요.

● **양길승** : 저는 솔직히 이렇게 논의되는 것으로는 적절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객관적 상황과 조건이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측면이 강하지만, 그래도 그렇게만 보는 것은 충분하지 못한 것 같아 다른 해석과 논의에도 틈을 열어둬야 할 것 같습니다. 김교수님이 반미라는 용어에 주눅들어 있다고 하셨는데 저는 확실히 그런 면이 있다고 보고, 그런 현상을 바로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오히려 주눅들어 있는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 현실을 잘못 보게 할 수도 있는 것은 아닐까요? 미국이 무소불위의 힘으로 우리 현실을 규정하고 있는 것을 밝혀 진짜 주눅들어 있는 현실의 다양한 측면들이 심층적으로 제대로 지적되어야 좀더 균형이 잡히지 않을까 합니다.

현 단계 한국 민주화운동의 양상

● **박호성** : 지금 시간 관계상, 조금 빨리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과거의 역사는 이 정도로 정리하고 오늘날 민주화운동이 처한 현실 문제로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아까 박석운 소장님께서도 오늘날도 87년 체제가 유지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광주항쟁, 87년 6월 항쟁의 현재적 의의와 한계가 어떤 것인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면서 오늘날의 운동들이 처해 있는 문제점과 과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양길승** : 저는 앞 세대의 문제의식을 모두 일일이 나무의 나이테처럼 확인해 나아가면서 할 수 있는 좌담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이 시기 우리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을 다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의미에서 6월 항쟁부터 봐도 큰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저도 60년대 학번이라서, 60년대 대학을 다녀서 소위 삼선개헌 반대 등의 그런 활동을 하고 그랬습니다만, 그 모든 것이 6월 항쟁 이후에는 그 전과 다른 새로운 단계로 들어섰거든요. 이것이 너무 과도히 평가되어서 소위 그 이전 운동권이라고 불렀던 운동권과는 다른 운동권들이 등장했다는 그런 평들도 있긴 합니다. 그 래도 6월 항쟁이 만들어 놓은 그 이후 세

대는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지금 87년 이후에 만들어진 단체들 중에 '민' 자가 들어간 단체들의 생년이 같거든요. 87년 세계는 그 이전의 세계와는 다른, 다시 말하면 유신이나 그 앞의 시대와는 완전히 다른 시대적 과제를 받아 안는 그런 작업이 부각됐다고 봅니다. 그 이후의 과정을 보면 전에 민주화라는 말이 의미하는 바가 87년 이후에는 구체적으로 각 부분에서, 총론이 아닌 각론에서 쌓여갔고, 지금 그것이 또 다시 총론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 북한 문제라든지 분단의 문제든지 미국의 문제들과 같은 또 다른 식의 과제가 주어졌다고 봅니다. 저는 6월 항쟁부터 시작하는 그 시기에 대한 바른 이해가 지금 우리 현실을 동태적으로 움직여 나아가는 힘에 대한 판단이든, 아니면 이 동태적 힘을 어떻게 조직해야 하고 나아가서는 어떤 지향으로 가져가야 하는가를 결정한다고 봅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각론이 아직 충분히 쌓여 있지 않아서 성과를 하나하나 지키기는 어렵지만, 전반적으로 총론으로는 안 된다는 사회적 현상을 확실히 심어냈다고 생각합니다. 각론을 만들어 가는 부분에서, 예를 들어 여성의 문제든, 환경의 문제든, 문화의 문제든, 각 내용이 풍부해져가고 있다고 봅니다. 87년 이후의 민주화운동은 각론을 키우는 운동, 그리고 이전의

정치 일변도, 지배구도 일변도의 운동이 아니라 실제로 생활의 문제로 가는 시작이었습니다. 달리 말해, 전 단계의 한계를 벗어나는 운동이었다는 것이지요. 새롭게 말한다면, 창조성의 운동,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는 운동 등으로 부를 수 있겠습니다.

● **지은희** :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해요. 여성 운동의 경우, 83년부터 남녀 평등을 외치면서 새로운 운동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반독재 투쟁의 흐름과 따로 독립해서 여성운동 단체를 만들었을 때, 그 때 생각이 나는데 당시 민주화운동의 주류에서 반대가 심했어요. 남녀 평등이라는 특수한 주제를 내걸면 운동의 전선을 약화·분열시킨다는 비난들이 꽤 있었어요. 이에 대해 저희는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여성을 조직하고 여성운동을 한다는 것이 일반 민주화 과정과 동시에 가야하는 것이지, 나중에 해야 할 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반독재 운동과 여성운동을 동시에 하겠다고 했지요. 이것을 나타내는 구호가 “따로 그리고 함께”였습니다. 이러면서 조직을 만들고 이 운동을 추진하던 중 87년이 되면서 여성운동이 변했습니다. 그 전에는 <여성평우회>를 중심으로 했다면, 87년 이후에는 <여성연합회>(이하

여연)가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아까 87년을 계기로 운동이 한계에서 벗어났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거기에는 동의하지 않아요. 이를테면, 87년 이후 형식적 민주주의가 이뤄지고, 사회주의권이 붕괴한 뒤 내부 토론을 거치면서 운동의 방식과 운동 주체의 다양화들은 훨씬 진전이 됐지만, 그것이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었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진전된 부분도 있었지요. 의식의 진전도 있었고, 83년 여성운동에 그렇게도 반대하던 운동권 남성들이 여연을 만들 때는 여성운동의 독자성도 인정하고, 여성운동이 우리 사회를 바꾸어나가는 운동이었다는 것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도 진전이 있었지요. 그런데 지적하고 싶은 것은, 87년 이후 성숙해 나가던 이쪽 민중운동이 90년 들어서 오히려 시민운동 쪽은 확대됐던 반면에, 자기의 영향력이나 조직력을 확대시키지 못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른바 시민운동과 민중운동 양측이 확대됐다면 운동의 역량이 훨씬 증가했을 텐데, 민중운동의 힘이 약화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잘못 보면, 민중운동과 시민운동의 갈등적 요소로 인해 한 쪽의 영향력이 감소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 박석운 소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만…….

● **박석운** : 단답으로 대답하면 되겠지요. 민중운동 진영이 약화된 것이 아니라, 전통적인 재야운동의 방식이 분화됐다고 판단합니다. 87년 이후에 신사회운동도 물론 발전했지만, 87년 이후에 가장 폭넓게 발달한 분야는 민중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지은희** : 87년에는 그랬지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90년 이후를 말하는 것이지요.

● **박석운** : 90년 이후에도 그래요. 노동자, 도시빈민, 이른바 민중운동 진영의 조직화가 가장 강화됐습니다. 다만, 약화된 것은 이른바 정통적인 재야운동이 분화 내지 그 중심이 소실되면서 재정비 과정을 거쳐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지은희** : 동의합니다.

● **박호성** : 87년을 민주화운동의 분수령으로 삼는다는 데 모두 이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때부터 각론적인 운동이 진행됐습니다. 반면, 전통적인 재야운동은 분화됐고, 그 전의 “무엇 무엇에 대한 반대”가 “무엇 무엇을 지향하는 운동”으로 발전하는 분수령이 됐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김교수님께서 오늘날 한국 사회의 성격을 다

시 한번 검토해주시면서, 민주화운동의 현재를, 그것의 성과나 특성이나 문제점을 포괄해서 현재 어떻게 평가하시고 있는지 먼저 이야기를 해주시지요.

● **김상곤** : 87년이 하나의 분수령으로서 그것이 여러 영향을 미치고, 작은 성과들로 맺어지면서 우리 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 왔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면에서 크게 다르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 사회의 성격을 어떻게 볼 것인가는 여러 가지로 제시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간단히 말해 우리 사회가 아직도 재벌 중심의 독점 자본이 경제와 정치권력의 내부 구조를 좌우하는 사회가 아닙니까? IMF 지배체제에 들어와서 그것의 폐해나 문제가 제기됐지만, 개혁세력이나 대안 창출을 위한 운동세력의 한계로 인해 여전히 그런 것은 변화하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경제적으로 진전이 이뤄지고 있는 면도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군부독재의 잔재들이 상당히 청산되어 가는 중이고, 절차적 민주주의가 충족되는 상황이며, 부르주아 민주주의가 이뤄지는 과정에 있다는 것이지요. 여기서, 과정이라고 말한 것은 여전히 권위주의적 정치권력의 잔재가 남아 있기 때문이고요. 사회적·문화적 면을 보자면, 특히 많은 진전이 있었습

니다. 시민사회 운동과 관련해, 크게 보면 우리 사회가 개방적인 다원 사회로 가고 있고 그것을 국민이 수용하고 있는 방향으로 가려는, 그런 지향성을 강하게 갖고 있죠. 민주화운동의 성과관 이런 사회 성격의 형성과 아울러, 정치적으로 암울했던 독재권력을 일정 정도 견제하고 더 나아가서는 기본적인 인권을 신장시키는 데 기여했다는 점입니다. 물론, 여전히 부족한 면이 있긴 합니다. 가령 기본권, 경제권, 사회권, 특히 기본적인 인간의 권리를 많이 신장시킨 성과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민주화운동 세력 자체의 부족한 점도 있고 마찰적인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인 세력 자체는 컸다고 판단합니다.

물론 내부의 분화와 역할 분담의 문제, 상호 지원과 연대의 부족 등이 있지만 상당 정도 성장했고, 그것이 앞으로의 민주화를 담보해 나아갈 세력으로 커갈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민주화운동이 가지고 있는 한계 및 과제는 그 운동이 정확하게 사회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지향성이 정립되거나 고민이 공유되는 것이 미흡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서로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중운동, 사회운동 등이 분화·발전해 가는데, 그것들의 상호연계, 상호연대를 위한 틀이, 또는 서로의 지원 역량들이 여전히 꾸려져 있지 않다는 점이 문제로 남아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 **박석운** : 이른바, 민주화운동의 개념이나 이념 등이 민중운동이나 시민운동의 관계를 고민함에 있어 포인트라고 생각하는데, 민중운동이 시민운동과 연대해야 되고 민중운동이 도와줘야 한다는 기능적인 접근은 바람직한 운동의 발전 방향으로는 미흡하다고 봅니다. 그 보다는 가치의 공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치의 접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민주화운동의 개념이나 이념을 정돈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김교수는 '개방적 다원주의' 라고 미국식 표현을 쓰셨는데 개방적 다원주의는 학자들이 많이 쓰는 표현이고, 우리 식 어법으로 이야기하면 이른바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를 좀더 구체화시키는 부분들이 우리 민주화운동에서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 되어야 합니다.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라는 것은 비정규적 노동자, 장애인 등의 문제를 의미하는데, 물론 여성들도 과거에는 약자, 소수자에 속했지요.

● **지은희** : 여전히 현재 우리나라 비정규직 노동자의 70~80%가 여성들이에요.

● **박석운** : 물론, 저는 여전히 여성들이 사회적 약자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미완의 자유주의적 가치나 권리가 구체화되어야 합니다. 공무원 노조의 결사의 권리라든지, 의료노조의 투쟁 과정에서 쟁점이 된 직권중재 같은 것들이나 사회권으로 보지 않고 기본적인 권리로 생각합니다. 결사의 자유 같은 것 말이죠. 특히 비정규직, 특수노동자(골프 캐디, 학습지 교사, 레미콘 운전사 등)가 요구하는 것은 자유권적 기본권에 속하는 것들이에요. 결국 노조 결성인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런 미완의 결사 및 표현의 자유가 민주화운동의 주요한 영역입니다. 이처럼, 약자와 소수자의 문제가 민중, 시민운동이 공유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둘째,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공공성의 영역에서 정확한 가치가 공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자유주의가 바로 공공성을 축소하는 것이고 그것이 일국적·세계적으로 많은 재앙을 가져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부분에 대한 새로운 가치로서 공공성의 확대, 유지, 정비, 강화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공공성의 합리화 혹은 적정화 같은 것으로 부를 수도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신자유주의에 대척되는 것으로서 공공의 선을 함께 만들어 나아가는 것을 공공성의 개념으로 잡고 함께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 **박 호 성** : 지금 하신 말씀은 자연스

럽게 민주화운동의 미래와 연결되는 논의입니다. 주체세력과 이념적인 차원에서 민중운동과 시민운동이 본질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연결해서 말씀해주시지요.

● **박 석 운** : 차이는 없고 다만 양태만 다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시민운동에 두 진영이 있지 않느냐, 이른바 보수적 시민운동과 진보적 시민운동의 분화가 있다고 봅니다. 초기에는 진보적 시민운동 진영이 보수적 시민운동 진영에 견인되는 경향을 보이다가 시간이 가면서 극복되는 과정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왕 말이 나온 김에 진보와 보수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단적으로 말해 정치적 영역에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은 진보, 국보법을 유지하자고 하는 것은 보수, 국보법을 개정하자면 중도라고 규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경제적 영역이나 생활의 영역에서 신자유주의의 세계화에 찬성하면 보수, 반대하면 진보라는 규정도 성립합니다. 이른바, 이것을 기준으로 시민운동이 구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른바 시민운동과 민중운동의 편의적 구분에는 동의하면서도 그런 구분의 잘못된 여러 가지 편향을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진보적 시민운동의 이념을 보수에

수렴시킬 수도 있는, 그런 편향적인 경향들이 있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 **박 원 순** : 민주주의, 인권, 삶의 질, 이런 목표라는 측면에서 민중운동과 시민운동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구분하는 기준 중의 하나는 민중운동은 계급운동·대중운동이고 참여운동은 공공선, 계급에 치우치지 않는 공공선을 확보하는 운동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다면 공공선은 무엇입니까. 특히 우리의 역사 속에서 노동자, 농민이 절대 다수를 차지할 뿐만 아니라 가장 많이 희생을 당하는 피해자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지원운동이라는 것이 공공선에 부합하는 것이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민중운동과 시민운동이 같은 궤도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박석운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민중운동이 지금도 꺾박은 받지만 그래도 개선이 되고 하는데, 특수한 계급적 이익이 부각될 때가 있더군요. 그런 과정에서 두 운동이 사안별로 함께 하기 어려운 지점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쨌든 시민운동이라는 것도 다양한 이념적 스펙트럼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분야를 가지고 있고, 그러므로 두 부문 운동의 관계를 지금 일률적으로 단정하는 것은 어려운 단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경실련도 어느 정도 웬만하면 같이 합니다. 조직의 사무총장이 누구냐,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많이 좌우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경실련과 참여연대는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 **박 석 운** : 민중운동과 시민운동은 신자유주의에 대한 태도가 달라요.

● **박 원 순** : 그렇게 단순한 문제는 아니고 복잡한 문제인 것 같은데요.

● **김 상 곤** : 87년을 계기로 시민운동이 나름대로의 시민권을 확보해가면서 다양화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민중운동과 갈등, 마찰, 대척점이 생기는 듯한 양상도 때로 보였습니다. 또한 민중운동도 나름대로 분화, 발전하고 시민운동도 더 빠른 속도로 분화, 발전하면서 점차 성숙해가고 있는 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93년 YS정권이 들어서면서 이제 우리 사회의 민주화도 어느 정도는 되지 않았느냐를 생각한 사람들이 시민운동에 많이 있었고, 그러면서 민주화를 바라보는 시민운동의 입장들이 조금 일반화되고 느슨해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DJ정권이 들어와 또 한 차례 그런 과정을 겪었는데, IMF 체제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본격적으로 밀어닥치면서 시민운동의 자기정체성을 고민하게

만들었습니다. 민중운동 자체가 전통적인 재야운동이 분화·해소되는 과정에서 자리를 잡게 되는데, 민중운동만으로는 민중의 삶이나 기본권을 나름대로 확보 신장해 나아가는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민중이나 시민운동 모두 DJ정권 중반기부터 서로를 고려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민중운동 쪽에서는 시민운동 진영이 시민적인 권리에 국한되는 것만이 아니라 결국 국민의 삶, 민중의 삶의 문제를 다 포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고, 시민운동 진영에서는 결국 시민적인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는 민중들의 삶이 진전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됐고, 권력과 자본의 성격에 대해서 시민운동 쪽에서도 좀더 정확히 인식할 필요를 느끼게 됐던 것이죠. 그동안 분화됐던 민중운동과 시민운동이 연대해 나아갈 필요를 느끼게 됐습니다. 이렇게 공동의 장을 만들어 나아갈 필요를 느끼기 시작한 것이 99년, 2000년부터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 **박 호 성** : 이제 화두를 바꿔서 민족운동과 노동운동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할지, 현재의 상황은 어떻고 이를 발전시키기 위해 향후 풀어야 할 과제는 어떤 것이 있는지, 이에 대해 한번 논의를 해 보죠.

● **박 석 운** : 과거 NL과 PD의 대립과 갈등이 있었는데, 현재는 양측이 수렴해 나아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에 민족운동과 노동운동의 개념은 좀더 급격히 수렴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IMF 이후 형성된 사회적 변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한미군 철수를 대중 집회에서 주장하게 된 것이 IMF 이후였습니다. 그것이 99년, 2000년쯤이었습니다. 그때 단병호 위원장과 식사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노동운동도 많이 발전했다고 말이죠. 주한미군 철수를 공식 집회의 제목으로도 걸고 말이죠. 운동의 초기 단계와 달리 지금은 많이 수렴되고 있습니다. 물론 약간의 강조점의 차이가 여전히 있기는 하지만요.

● **강 정 구** : 저는 수렴과 관련해 6월 부시 행정부의 '악의 축'을 둘러싼 전쟁 위협이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라고 봐요. 생명권이라는 것은 민주화나 민주주의에서도 기본권 중의 기본권입니다. 이런 생명권이 특히 미국에 의해 끊임없이 위협을 받아왔고, 특히 지난 6월 '악의 축' 발언과 위기, 그 때 6백~7백 개 민중시민운동 단체가 공동연대해서 전쟁반대운동, 반미 운동을 굉장히 맹렬하게 진행시켜 전쟁의 불길을 끌 수 있었잖습니까? 아까 공공선 이야기를 했지만 이것

이 전체 사회에 절박한 문제들이 있을 때 서로 공동연대를 하는 좋은 전례나 귀감을 만들어 냈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민족운동이든 노동운동이든 연대의 전망을 낙관적으로 볼 수 있게 한 경험이었다고 봅니다.

● **박원순** : 강선생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외국의 경우, 미국과 일본을 가 보면 우리는 그나마 네트워크가 잘 되는 편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 전국적으로 무엇을 함께 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졌습니다. 우리의 경우, 부시의 악의 축 발언 이후 많은 투쟁들이 있었지요. 그때 미국 대사를 만나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의견들이 미 대사에 연결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강한 목소리와 부드러운 목소리의 조화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회 전체의 쟁점에 대해서는 연대가 필요하고 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의 활력, 민주주의, 기본권 보장, 권력 기관의 투명성, 민주주의 권력이 되도록 연대를 잘 활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본과 같은 전철을 밟지 말라는 보장은 없거든요. 학생운동의 경우 일종의 사회운동 예비군인데, 관심도가 떨어지고 학생운동의 세력이 약해지면 결국 전체 사회운동에도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그나마 사회운동의 활력이 있을 때 좀더 높은 수준의 민주주의를

확보해야 합니다. 동시에 학생운동을 포함한 사회운동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재충전하도록 노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운동이라는 하나의 운명 공동체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요.

민주화운동의 과제와 전망

● **박호성** : 결론적으로, 우리의 지체된 민주주의를 한 단계 진전시키기 위해 우리 사회운동들이 지향해야 할 바는 무엇인지, 특히 신자유주의 세계화 시대에 우리 민주화운동이 해결해 나아가야 할 과제들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논의해 보죠.

● **박석운** :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약자·소수자 권리를 확보하는 문제, 결사의 자유 같은 기본권을 확보하는 문제,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는 공공성 영역의 유지·확대를 위한 사회 내의 일정 정도 가치 공유나 협조, 역할 분담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하나의 영역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이른바 공기업의 민영화 문제, 나아가서 교육 시장화, 사회보험의 시장화, 공무원 조직을 어떻게 개편할 것인가, 공공선을 유지하고 확대하고 실현하는 조직으로 공무원 관료 조직을 어떻게 개혁해 나아갈 것이냐. 개발 문제, 환경 문제를 어떤 가치 우선으로 가져갈 것이냐, 이런 문제들이 민중적

민중운동이 국민에게 민중운동 방식만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운동 같은 방식에 의해 꾸준히 견인되고 혹은 자극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풍요로워질 수 있다고 봅니다.

- 양길승

기반과 공공선적 관심이 합쳐지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때문에 시민운동과 민중운동을 구분하는 현실적 유용성은 일정 정도 인정하지만, 지향점으로는 그 방식보다는 공공선의 가치를 공유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재구성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소수자 권리 문제, 기본권 문제 등은 커다란 이론의 여지없이 현재까지 잘 운영되는 영역이고, 공공선의 영역에서 같이 고민해 보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신자유주의 세계화 정책의 물꼬를 바꿀 수 있는 담론의 기초가 될 수 있고, 그것을 바탕으로 대중 투쟁이 진행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박호성 : 아까 김상곤 교수님께서 권력과 자본에 대한 시민운동 측의 인식이 더 심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조금 염두에 두시면서 현재

한국 민주화운동의 걸림돌이 무엇이며 그것을 제거, 극복하기 위해 상이한 지향과 목표를 지니고 있는 운동들이 어떤 관계를 형성하며 나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 말씀을 나눠주시지요.

● 양길승 : 시민운동과 민중운동의 구분이 적절치 않다는 주장도 있지만, 현상적으로 그렇게 구분하고 있고 그런 차이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을 어떤 식으로 융합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요.

그런데 시민운동 차원에서 시민의 내용이 주로 노동자입니다. 물론 그 노동자 속에는 사무직 노동자, 전문직 노동자들이 많지만, 대다수는 (생산직) 노동자라고요. 문제는 현재 민중운동 방식이 이런 포괄적인 시민운동의 발산을 담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민중운동이 시민운동을 안을 수 있는, 그런 조직이 풍부해지고 있지 못한 것이지요.

전문직 노동자로서 일반적인 민주주의 권리를 표현하고 실현할 수 있는 장이 오히려 시민운동 측에서 훨씬 활발했습니다. 이런 문제를 감안하면 앞으로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민중운동이 그전에 민중운동 방식만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운동 같은 방식에 의해 꾸준히 견인되고 혹은 자극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풍요로워질 수 있다고 봅니다. 내용적으로 공공선을

지향하기 때문만이 아니라 운동 방식에 있어 교류를 통해 서로 잘 융합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문제는 일정한 정도의 네트워크를 가능케 만들었던 것이 이 운동이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었기에, 혹은 일정 정도 그 뿌리를 공유하고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지금 현재까지는 운동의 자발적 논리에 의해 결합되는 방식이 아니고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유지되고 있는 측면이 있었는데, 향후에 시급한 것은 인적 네트워크, 즉 사람에 의존하지 않고 연대를 가능하게 만드는 방식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빠져나오면 네트워크가 공백이 될 수도 있어요. 이제 각 부분에서의 인적 축적을 조직적 축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것이 지금과는 다른 형태의 포럼이 되든, 네트워크가 되든, 새로운 형태로 바뀌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고민과 실천이 필요합니다. 향후 전망과 관련해 가장 큰 문제는 이제는 ‘문화적 운동’이 중요해진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운동 문화가 새롭게 변화된 현실에서 문화로서 수용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을 통한 운동이 자리잡아가면서 인터넷에 익숙해진 문화, 인터넷적인 감수성을 가진 젊은이들을 끌어안는 운동 문화의 창출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들어와서 폭발시

켜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 운동에 대한 문화적 접근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운동의 문화화가 되는 과정 속에서 운동이 가져온 장점들, 자발성, 신명, 진지함, 신뢰감이 다시 평가되고 구성되어야 합니다.

운동의 미래는 운동의 문화화를 깊이 있게 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지금까지 해왔던 운동이 자리잡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지금 현재 우리 사회의 민주화를 보는 것 중에서 제일 어려운 점은 구조가 다층화됨에 따라 문제도 다층화되어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총론 하나로 통일됐던 시대는 지나가고, 그렇게 해버리면 정반대의 입장, 예를 들면 민주적이고 진보적인 입장들이 뒤집어 보면 반민주적이거나 보수적인 측면을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층화된 문제 구조를 놓고서, 예전의 방식과 똑같이 접근한다면 다층이 갖고 있는 활력, 다층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돌파해내는 힘 같은 부분들이, 다층으로 조직되어 있어 다층에 걸맞은 방식을 가져와야 하는데, 이것을 평면으로 만들어서 문제를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반성해야 한다고 봅니다.

제 이야기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지금껏 해온 운동을 평가하고 그것을 제도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다면, 그리고 그런 부분의 소통과 평

가가 다른 부분과 진지하게 대화되고 소통될 수 있다면, 지금 우리가 기대하는 힘의 새로운 근원은 지금까지 우리가 해온 운동을 정리해 보고 수렴하는 과정을 통해서 성찰될 것이라 보는 것이 하나이고, 두 번째는 그 동안 쌓여왔던 인적 네트워크를 프로그램화로, 또는 새롭게 소통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야 하는 인적 축적의 프로그램화, 네트워크화하는 부분이 이뤄지고, 그리고 기존의 운동 속에서 해왔던 문화의 변화를 수용해내고, 이런 부분들이 갖추어진다면 지금 본질적인 문제라고 규정했던 것들을 한 단계 극복할 수 있는 저력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박 호 성** : 그렇다면 민주화운동의 앞날은 어떻습니까? 비관적인가요 낙관적인가요?

● **양 길 승** : 저는 기본적으로 낙관주의자예요. 문제가 있는 곳에 도전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문제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문제에 빠져버리지만 않는다면, 지금 당장은 아니라도 그 문제를 해결할 길은 보이거든요. 지금 제일 중요한 문제는 굉장히 낮은 조직률을 가지고 강력한 노동운동을 하듯이, 우리가 가진 가장 큰 장점은 우리의 문제에 대한 대응 능력에서, 우리가 실제로 쓸 수

있는 힘, 그 이상의 것을 꾸준히 써 왔다고 믿습니다. 우리 문제에 대한 제대로 된 성찰과 반성이, 그리고 소통이 이뤄지는 구조가 재생산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 **지 은 희** : 지금 양길승 선생님께서 이야기한 것처럼, 한국 민주화운동의 성과와 특성은 역동성이예요. 그런데 세계 어디를 다녀 봐도 이렇게 역동적으로 사회 제도를 바꾸고 사회의 다양한 문제에 도전하는 운동은 없어요. 앞으로도 이런 역동성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고 유지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민주화운동의 주제를 들여다 보면 좀 한심한 측면이 있어요. 예를 들면 국가보안법 폐지, 이것이 보수와 진보를 나누는 핵심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것은 기본적인 자유, 사상과 이념의 자유라고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진보와 보수를 나누고, 되느니 안 되느니 해야 되는 것은 민주주의 발전 수준에서 차이가 크다는 것을 느끼게 해 줍니다. 기본권적 자유의 논의가 이렇하고, 여성을 보더라도 여성의 정치적인 권리는 세계에서 90위인가 그래요. 이런 게 우리가 아직 균형 잡히지 않는 주제들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따라서 우리 민주화의 목표가 뭐냐, 그건 장애인이든 여성이든,

생산적이든, 사무적이든, 모든 인간이 품위 있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요. 품위 있는 인간을 만드는 게 우리의 목표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의 인권과 평등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워낙 불균등한 발전을 한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할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또 피해 받은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운동의 주제 및 운동의 역동성이 살아날 수 있는 근본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은 누구나 행복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이것을 기존 운동의 입장에서 어떻게 꼬집어내느냐 하는 게 운동하는 사람들의 과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운동의 방식도 너무 튀다던가, 너무 소재 중심으로 간다던가 하는 것에 자체 반성을 해야 하고, 운동을 대중화시키는 방식을 찾아내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박 호 성** : 양선생님과 지선생님 두분의 말씀은 품위 있고 인간다운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운동의 문화화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겠군요.

● **강 정 구** : 향후 과제와 관련해 말씀

을 드리면, 그 하나는 세계화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또 다른 하나는 민주화의 현 단계 과제가 무엇이나 하는 것으로 대별할 수 있지요. 저는 세계화라는 것은 많은 측면에서는 일체화라고 생각해요. 중국에서는 일체화라고 번역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중심으로 모든 것을 일체화시키는 것이고 신제국주의라는 것입니다. 전부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성격이 너무 잘다는 것이죠. 이런 문제점에 봉착해서 잘못하면 우리 나름대로의 정체성을 상실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깊은 것이지요. 정체성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 왜 민주화와 관계가 있느냐 하면, 저는 인민권력, 권력의 주체화, 기본권의 주체화가 민주화의 바탕이라고 보는데, 일체화가 될 경우 우리가 우리의 역사적 조건, 현실적인 조건에 맞는 그런 기본권을 확보하기 위한 운동의 주체로 과연 설 수 있을지 걱정됩니다. 단적인 예로, 신자유주의에서 공기업의 해외매각화가 유명하죠. 우리가 정체성도 없이 이걸 일체화식으로 따라갔을 때에 가장 염려되는 것은, 만일 통일 시대가 도래했을 때 국가가 통일 사업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자원을 동원해야 하는데 공기업을 해외 매각할 경우, 자원 동원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아무래도 북한은 공기업이든 국유든 이런 소

성은 역동성이예요. 그런데 세계 어디를 다녀 봐도 이렇게 역동적으로 사회 제도를 바꾸고 사회의 다양한 문제에 도전하는 운동은 없어요. 앞으로도 이런 역동성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고 유지될 거라고 봅니다. - 지은희

유 구조가 그쪽 중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외 매각을 그대로 따를 경우 소유 구조에 있어서도 동질성이 약화될 수 있고, 통일결정 시기에 자원동원력이 없으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예요. 김대중 정권의 가장 모순적인 정책이 통일 지향적인 햇볕 정책과 공기업 해외 매각화인데, 이것은 완전히 모순이예요. 한편으로는 통일 지향적인 정권으로 역사가 평가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아주 반통일 지향적인 그런 정권이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세계화 시대의 정체성 문제, 이런 것들이 민주화에도 직결되어 있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향후 과제에 관련해, 저는 냉전분단체제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아까 이야기하셨지만 국가보안법이 해결되지 않는 것이 냉전분

단체제의 원인이거든요. 그 다음 기본권 중에 자유권, 정치권, 사회권보다도 앞서가는 것이 생존권이라고 보는데, 평화의 문제, 전쟁 위협의 문제, 생명권의 문제가 바로 냉전분단체제와 직결된 문제거든요. 그래서 냉전분단체제의 해소나 극복, 또는 약화 이런 것이 민주화와 직결되면서 통일운동과 민주화운동은 서로 맞물리면서 진행되어야 하지 않느냐. 또 자유권 중에 기본이라고 볼 수 있는 학문, 사상의 자유 이런 것도 분단체제 때문에 엄청난 제약을 받고 있으니까, 우리는 지금 민주화의 심화를 위한 현 단계의 과제 중 하나로서 어떻게 하면 냉전분단체제를 해소, 약화 아니면 극복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통일운동도 그런 것과 결부시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 김 상 곤 : 저는 올해 대통령 선거가 있는 만큼, 우리 운동의 지향성을 이것과 관련지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사회의 지향과 관련해 지금 이 시기는 진지한 고민을 필요로 하는 때인 것 같습니다. 전통적인 사회주의, 사민주의, 무정부주의 등과 같은 이데올로기, 또는 제3의 길, 이런 식이 아닌 또 다른 면에서 우리 민주화운동을 생각해 볼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가 자

발적·자율적으로 공동체 정신을 키우고 또는 그것을 공유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라는 면에서, 가령 공동체적 민주주의 또는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많이 부족 하기는 하지만 자율과 자치에 대한 열망 의 제고와 관련된 자기 발전적인 민주주의, 이런 것은 산업 현장이나 시민 현장, 어디든지 우리가 생각하고 지향해야 하는 가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향후 과제 들은 이미 다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금년 대선과 관련해서 제가 생각하는 우리 민주화운동의 과제 가운데 하나를 말씀드리면 그것은 정치세력화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민주화운동 자체의 역량이나 영향력이 커졌다고 생각하지만, 서구나 일본의 민주화운동이 지금 침체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다른 측면에서 보면 상당 부분 정치 영역에서 그런 역할을 해내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그런 과제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민주화운동의 경험과 특징들, 그 추진력 속에서 진보 진영의 정치세력화를 만들어 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까지 여러 차례 시도됐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민중운동과 시민운동, 민주화운동 진영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금년 12월 대선은 이미 다가온 스케줄이기 때문에 역량을 발휘하기 어

렵겠지만, 금년 대선의 상황 등을 지켜보고 일정 정도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는 여러 방법도 모색해 볼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런 고민까지 할 때 운동의 대중화라는 것이 글자 그대로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요. 대중화의 수단이 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까 이야기 나온 인터넷 등을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 결국 문제는 무엇을 위해 대중화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고민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 박 호 성 : 아까 글로벌 자본주의 말씀을 하셨는데, 과제와 관련해 이주 노동자의 문제 등 새로운 사안들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제들에 대해 말씀을 좀 나눠주시죠.

● 박 석 운 : 이주 노동자 문제는 약자·소수자 문제의 최하층에 배치되어 있다고 봅니다. 이미 이 문제는 불가역의 상황이 되어 있어요.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우리는 단일민족 사회를 쪽 이야기 해 왔던 말이죠. 외세와 관련해 민족주의가 자율을 지키고 자주성을 지키는 하나의 진보적인 요소가 될 수 있지만, 한국에 와 있는 이주 노동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민족주의도 극복되어야 할 것으로서 문화적으로 다민족 공생사회를 지향하는 현상들을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 아

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는 그 사회에 들어섰습니다. 현재 이주 노동자는 한 40만 명 가까이 되거든요. 현재 정부에서 7월 달에 발표한 방식대로 가면, 아마 기하급수적으로 불법체류자가 늘어날 겁니다. 정부 대책은 그 자체로서 실패를 자백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이주노동자들을 사람으로 대접해야 합니다. 사람으로 대접한다는 것은 노동자로 대접한다는 것이고, 노동자로 대접한다는 것은 한국 노동법을 다 적용해야 한다는 것인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을 하는 것이 핵심 요건이죠. 물론 제도 개선만으로 다 되는 것은 아니죠. 제도 개선은 하나의 출발점이고 이와 함께 우리의 문화적 지형 또한 달라져야 합니다. 단적인 예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살색 크레파스 이야기'는 하나의 이벤트에 불과한 겁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주노동자들의 자녀가 지금 학교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그런 상황이죠. 체류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한국 여성들이나 다른 외국 여성들과 결혼해 정착하는 상황이 구체화되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소화해 다함께 민주주의와 정의를 이야기하며 같이 살 수 있는 문화적 잠재력을 전혀 길러놓지 못한 상황이거든요. 이런 점에서, 이주노동자

문제는 노동 문제이기도 하지만 다민족 공생사회로 가는 문화적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재 이 문제에 집중할 수 있는 역량은 빈약하기 짝이 없지요. 예를 들면 상담센터가 전국에 서른 몇 개 정도 모여 있는데 특정 지역에 모여 있고, 그렇지 않은 지역에 들어와 있는 것까지 합치면 50~60개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크고 작은 조직당 각각 한 두 명이 일을 해요. 좀 많이 일하는 데가 3~4명이고요. 그런데 이주노동자 인구는 40만 명이란 말이죠. 이 40만 명이라는 것은 최소한 40만 개의 경우가 있다는 소리도 되죠. 이 문제에 대한 우리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 상 곤** : 약자와 소수자 권리 문제와 관련해서 비정규직 노동자와 이주 노동자 문제가 있지만, 다른 한편 장애인 부분을 좀더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장애인 문제는 민주주의와 관련된 모든 문제가 집중되어 있지요. 따라서 다소 과장하면 장애인 문제는 민주주의를 풀어 가는 실마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 **양 길 승** : 저는 그게 아주 좋은 촉발점이 된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동력으로 몰아갈 수 있는 것이 사회 봉사를 중요한 사회운동 방식으로 수용하는 것인데요. 사회 봉사를 하면 여러 가

지 효과가 나올 수 있고 운동의 저변도 굉장히 넓힐 수 있어요..

● **김 상 곤** : 장애인들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어둡고 외롭게 격리되어 있는 부문이죠. 장애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운동을 하다보면, 우리 사회의 일반 민주주의와 관련된 문제를 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것을 풀다 보면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민주화와 연결시켜 그것에 기여할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한 마디만 더하면 운동의 재생산 문제, 아까도 학생운동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운동이라는 것이 그동안 자율적이고 자발적인, 또는 교육받는 과정에서, 혹은 성장 과정에서 몸으로 겪으면서 형성된 의식 속에서 나왔는데, 그걸 이제는 조직화해서 운동을 재생산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즉 피부에 와 닿는 억압이나 탄압, 이런 것을 당하는 사람들이 점차 적어지고 있는 경향, 일반적인 폭력이나 정치적인 억압, 이런 것들이 정교화되는 상황에서 우리 운동의 재생산을 둘러싼 문제는 아직 우리 운동의 역동성과 투쟁성이 살아 있을 때, 재검토되면서 명확하게 목표를 잡아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학생운동과 관련해 보자면, 학생운동의 재생산은 교육 개혁에 대한 더욱 진지한 고민이 맞물려 진행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민주화운동의 새로운 동력

● **박 호 성** : 지금 여러 선생님들이 민주화운동의 향후 과제, 전망과 관련해 많은 점들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조금씩 구체화시키고 실현시키는 것인데, 그렇다면 그것을 밀고 나아갈 수 있는 동력이라고 할까, 그 기반은 무엇인가요?

● **박 석 운** : 한국 민주주의의 전망과 과제에 덧붙여 그 가능성의 기반을 고민할 때, 붉은악마나 노사모 같은 것에 대해 좀 이야기하고 들어보고도 싶은데요. 물론 노사모나 붉은악마도 매우 긍정적인, 새로운 활력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측면이 있지만, 좀 다른 각도에서 보고 싶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제일 큰 문제가 자신이 노동자로 살면서 자신의 정체성이 형성되지 않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중고등학교 교육에서 반드시 노동이 우대되어야 한다는 교육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사람들은 자신의 부모한테 자본을 물려받지 않는 한 노동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물론, 농민들은 약간 다르지요. 그래서 추상적인 이념 문제도 문제지만 지금 실권되어 있는, 말하자면 사라져 있는

군사독재 시절 내지는 냉전 시대에 사라져 있던 반쪽 부분을 공식적으로 복원해 내면서 우리의 새로운 세대들에게 교육시키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저는 아까 말한 것처럼, 대학의 학생운동이 활력을 잃어버리는 추세로 가면 전체적인 사회운동도 위축될 것이라는 데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중고등학교 교육 시스템을 변화시켜 특히 다른 것은 몰라도 노동 교육은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동 교육을 시켜서 정확한 노동자로서의 권리와 의무, 자신이 서 있는 자리에 대해 정확하게 정리해 주는 훈련이 되면 그런 부분이 다양한 방식으로 새 세대의 활력들을 올바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기초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약간 걱정이 되거든요. 붉은악마나 노사모를 보면, 갈 곳 없는 젊은 에너지가 그곳으로 모이고 있는 걸로 판단하거든요. 물론, 노사모는 지향점에서 붉은악마보다는 조금 더 구체화되어 있기는 하지만 말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 문화는 '낙' (樂)이 없는 문화잖아요. 기존 시스템을 보면 낙이 없잖아요. 그래서 출구를 찾지 못하는 에너지가 한편으로는 '붉은악마' 현상으로, 또 다른 한편으로는 노사모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시민운동 진영이나 민중운동 진영 다 마찬가지로지만, 보통 진보 진영이라고 통칭하는 곳에

서 이런 생동하는 에너지가 제대로 가닥을 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출구를 함께 만들어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세대들에 대한 교육적 투자를, 그 교육도 수동적 교육이 아니라 제도 교육 속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모색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강정구** : 저는 기본적으로 붉은악마하고 노사모하고 동일선상에서 봐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오늘 논의가 민주화에 대한 것인데, 붉은악마는 정치민주화나 경제민주화, 혹은 생활민주화와 아무 연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한 에너지의 분출이라는 면이 상당히 강한 건 분명하지만요. 그러나 노사모의 경우에는 각 지역 등에서 나름대로 시민운동이나 그런 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주축이더라고요. 그리고 분명히 제도정치권 내의 반민주성이라고 할까, 그런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굉장해요. 국민 경선이라는 것은 정치 영역의 민주주의에서 국민 일반이 권력의 주체가 되는 하나의 모델인데, 제도권 정치가 엉망진창이니까 그들에게 맡겨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직접 나서야겠다 하는 일종의 직접민주주의 요소가 분명한 목표로 설정되어 있는 거지요. 또한 그것을 구성하는 사람들이 시민운동 등을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목적의식적입니다. 그런 점에서

는, 분명한 차이를 볼 수 있고, 노사모의 경우에는 앞으로도 지속된다면, 우리 민주화에 굉장히 기여할 수 있는 동력이라고 봅니다.

● **박호성** : 붉은악마의 노사모화인가요?

● **강정구** : 그것은 앞으로의 과제가 될 수 있겠지요.

● **김상곤** : 붉은악마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저는 붉은악마 현상을 하나의 가능성으로 적극적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노사모는 정치적인 영역에서, 붉은악마는 문화적인 영역에서 최근에 나타난 대표적인 상징들이라고 보는데, 붉은악마가 보여준 성과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논의가 됐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속에서 공동체적인 그 무언가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민주주의는 개성을 중요시하지만, 그래도 다른 한편으로 너무 많이 분화되고, 파편화되고 개인화되는 것을 상당히 우려한 측면이 없지 않았습니니다. 그런데 이번 경험을 통해 그 분화되고 파편화되고 개인화된 분자들에게 서로를 끌어당길 수 있는 자극이 주어질 경우, 얼마든지 공동체적 의미를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는 가능성

이 현실화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것도 자발적이고 자율적으로요. 물론 이런 가능성이 곧바로 정치적·사회적 영역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하나의 가능성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또 그 가능성과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아까 우리 민주화운동이 가지는 성격 가운데 역동성을 말씀하셨는데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의 민주화운동은 실행성이나 개혁성을 상당히 강하게 가지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시민운동도 사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실행성이나 개혁성을 상당히 강하게 띄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요. 이제껏 이런 특징들을 소중하게 키워 왔죠. 이걸 주어진 것이 아니라 민주화운동 진영에서 스스로 만들어 키워 왔는데, 이제 이것을 가지고 앞으로 추구해 나아가갈 과제는 지금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활동가든지, 현장과 밀착된 교수라든지, 바로 우리의 책무에 해당되는 것이지요.

● **지은희** : 조금 다른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지만, 노사모나 붉은악마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운동가들이 일정하게 침체되고 뒤 처진 것은 아닌가. 대중의 역동성에 굉장히 놀랐거든요. 우리가 2000년 총선시민연대를 할 때, 그게 시민운동으로서는 전국적 수준에서 가장 많이 활성화된 시기였거든요.

약 9백 개 단체가 조직됐는데 어떤 사람은 그걸 긍정적으로, 어떤 사람은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지만, 저는 보통 국민들의 의사나 의지를 잘 받아서 유권자 운동을 했던 것이라고 봅니다. 그때도 그 운동이 그렇게 성공할지 몰랐다는 거죠. 물론 언론이 도와준 측면이 있지만 그게 그렇게 호응을 받고, 국민들이 그런 것을 원하고 있었다는 것을 몰랐던 거죠. 그런데 이번에도 굉장히 놀랐어요. 그래서 운동가들도 이제 세대 교체가 되어야 하지 않나,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정치 세력화하고 어떤 부분은 새로운 사람들이 새로운 방식으로 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 **양길승** : 그것을 다른 차원에서 이야기 해보죠. 실제 상황을 보면, 이휘 낸 것보다 갈 길이 굉장히 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방 자치제를 세 번 거치는 동안, 첫 번은 그냥 들어가고 다음 번에는 준비해서 들어가자고 그렇게 말했지만 그 두 번 다 우리의 힘이 전혀 미치지 못했어요. 이런 맥락에서 판단하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만큼 해 왔다는 이야기이지 상당히 많은 일을 했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따라서 과제는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은 것들 중에서 특별히 여러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는 힘에 맞춰 운동을 해야

하거든요. 다시 말해, 운동을 키우고 탄력을 받아가면서 해야 합니다. 봉사하듯이 어느 한 과제를 곳곳이 붙들고 사는 사람들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이것을 일정한 정도의 힘으로 발휘해내는, 그런 식의 구조를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지요. 지금 살펴보면 그런 역동성을 발휘했던 것들 중 굉장히 성공했던 예가 총선연대이고, 그 외에도 몇 가지 성공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런 성공 사례들을 보자면 지속적인 흐름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불연속적으로 갑자기 드러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 간격들을 메우려는 노력이 없었습니다. 총선연대 활동 이후에 시민연대를 만들었는데 시민연대는 총선연대의 활력을 살려내는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죠. 중요한 것은 이 불연속성으로 되고 있는 것들의 중간관리 부분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점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이 놓치고 있는 점을 살펴보는 방법 중의 하나로 아까 문화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 **박석운** : 저는 붉은악마와 노사모를 비슷한 현상으로 보는데, 강교수님은 또 다르다고 말씀하셨지요. 다르게도 볼 수 있지만, 공통적으로 보는 점과 다르게 보는 점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또 다른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붉은악마와 노사모를 공통적

이라고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 자발적·대중적 역동성, 신명, 공동체적 기풍 정도가 되겠지만, 그 외에도 공통적이라 볼 수 있는 것이 기존의 제도권도 못 잡고 있고 진보 진영도 못 잡고 있는, 말하자면 가공되지 않는 에너지라는 점이지요. 현재의 제도권 내지 기존의 수구적 시스템에서도 벗어나 있는, 찌들리지 않는 이런 것이 있단 말이죠. 이런 가공되지 않는 에너지는 긍정적인 면이지만, 걱정스러운 점은 붉은악마의 경우 그것이 파시즘으로 갈 수 있는 지름길 중의 하나일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마찬가지로 노사모도 어떤 현상이 생기냐 하면, 붉은악마와는 다른 점이 있죠. 붉은악마가 정치적 지향성이 없고 문화적·스포츠적 관심으로 모이는 것이지만, 노사모의 경우는 한 개인의 정치적 문제로 투영된, 우리 사회의 정치적 변화에의 욕구가 에너지로 터져 나오는, 정치에의 변화의 욕구가 한 개인의 문제를 매개로 터져 나오는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개인을 매개로 해서 터져 나온다는 점입니다. 물론 이런 현상은 진보 정당의 발전에 있어 일시적으로나마 중요한 장애물 내지 반드시 거쳐가야 할 중요한 포인트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에너지, 그 정치적 변화의 욕구는 지향점을 가지고 조직적으로 정리되어야 합니다. 지향점은 어렵פות한

데 조직은 네트워크로 가면서, 결과적으로 새로운 정치세력화의 기대점, 아 저런 방식으로 대중의 참여를 고취시키는 정치세력화가 가능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가능성을 볼 수도 있지만, 개인적 네트워크의 개념으로 가다보면 구조적인 정치세력화로 가는 또 다른 걸림돌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한계를 보여주지 않겠느냐 하는 점에서 저는 두 현상 모두 우리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그 가공되지 않는 에너지를 어떻게 진보적 전망을 갖고 몰고 터 나가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똑같은 현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노동교육 이야기를 언급했죠. 이 가공되지 않는 에너지를 진보적 전망을 갖고 만들거나 하는 것이 아닌, 물꼬를 터 나가는 그런 전망이 있어야 하겠다 하는 이야기죠.

● **양길승** : 우리 운동의 현실을 잘 보여주는 현상으로 단체나 행사의 이름이 길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목표나 주체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길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심할 때는 30자가 넘기도 합니다. 긴 플래카드를 제목만으로 꽉 채우는 경우를 종종 보셨을 겁니다. 좋게 보면 결의를 드러내는 것이고 추상적이지 않고 구체적이고 운동의 실명화를 이뤄 가는 것으로 볼 수도 있지

만, 달리 보면 조바심을 내고 있거나 운동이 일반화나 대중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드러내고 주체도 제한하는 것 같은 인상을 줍니다. 또한 점차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거나 기왕에 해오던 운동으로 상당한 진전되고 있지만, 아직도 확실한 차별화를 만들어내지 못했거나 결정적으로 변화를 만들었다고는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분위기를 어느 정도 잡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정작 중요한 문제들을 진전시키지 못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의제 제기에서 조금 나아갔지만, 의제 설정을 할 정도로 운동이 성장하지는 못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운동의 과제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힘을 심화시키고 네트워크를 넓히는 것을 넘어서 새로운 감수성을 가진 새로운 주체들이 새로운 과제를 형성화해내야만 다음 단계로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문제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달라졌다는 예로 많이 거론하는 빙상 경기에서의 오노 신드롬이나 붉은 악마 현상을 과도하게 평가하지 않아도 운동의 동력이 달라지고, 양상이 달라지고, 문화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일입니다. 그런 변화를 담아내 접근을 달리하면 운동 문화를 바꾸거나 풍부하게 하는 길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의 6월 거리응원이나 전 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 반대운동 집회 문화가 달라지고 있는 것도 하나의 경향으로 볼 수 있

기 때문입니다.

● 박호성 : 예, 고맙습니다. 오늘 나온 이야기들을 따로 정리하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제기된 여러 문제들에 대해 만족할 만큼 충분한 토론이 이뤄졌다고 할 수는 없지만, 현재 한국 민주주의가 처한 상황과 문제점, 그리고 그것을 더욱 심화·발전시키기 위한 방안들이 격의 없이 논의되고 공유됐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토론이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움직임들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